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지를 뚫고 의장직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18세 투표권·위성정당 총선 앞둔 선관위의 '3대 숙제'

범여권서 수도권 통·폐합 강조
보수권, 호남 선거구 축소 주장 등
정치권 공세에 공정한 방향 모색

투표연령 하향... 교내정치화 우려
비례자유한국당 등 창당 계획에
'위성정당 명칭' 여야 주장 엇갈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종 성범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선거구 확정 관련 범여권은 수도권 통·폐합을 강조하고, 보수권은 호남지역 선거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정한 방향을 모색 중이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나온 문제점과 위성정당 관련 명칭 논란도 보완해야 할 쟁점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각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 여야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분구 작업에 앞서 진행되는 정당 의견 청취에서 유리한 지역구를 한 곳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해 열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확정한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한 구간은 13만6056명, 하한 구간은

27만312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경기군포갑·을, 안산상록갑·을과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 등은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 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의 석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절차상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든다. 구성한 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실제 획정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행안위에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은 획정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 분쟁 속에서도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민주교육 실현' 사이에서도 고심에 빠졌다. 국회가 앞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

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53만2000명의 새 투표권자가 생겼다. 일각에선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의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현재는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위성정당 명칭 여부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패딩형 점퍼 보급목적 '자랑' 아냐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무기체계 외의 군수품(전력지원물자)도 무기만큼 중요하다. 장병의 안전과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전력지원물자의 신속한 보급이 이뤄진다면, 장병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력지원물자 보급은 '무엇이 목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장병과 국민을 위협인지, 군의 성과와 정부의 치적을 위협인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예산으로 '패딩형 동계 점퍼'를 지난해 11월부터 보급했다. 일반 작전환경이 아닌 병영생활용으로 보급이 된 것이라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장병들이 추위를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 당국이 보도자료를 내기 전 사전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의지가 앞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였다.

6월 사이즈를 측정하고 11월 초에 이미 1만5000벌 정도가 두 곳의 전방사단에 보급됐고, 육·해·공군의 격오지 부대에 연말까지 보급을 마친다는 게 당시 군 관계자의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해 육군만 약 10만벌의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됐다.

그런데 보도이후 '사이즈가 작아 못 입는다'는 소문과 제보가 들어왔다. 소문은 사실이었고, 설마는 역시가 돼버렸다. 12일과 13일 일부 매체들은 패딩형 동계점퍼가 사이즈가 작아 부대 창고에 쌓여 있다고 보도했다. 군의 관계자는 "해·공군의 경

우 보급대상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사이즈 문제가 크지않았지만 보급대상 인원이 많은 육군의 경우 먼저 사이즈를 측정한 인원들이 더 큰 사이즈를 가져가면 문제가 커졌다"면서 "약 2000벌 정도가 보급되지 않고 보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맞지 않는 사이즈에 대해 관련업체는 '동계점퍼의 사이즈 규격을 굳이 잘 못 설정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우리와 경쟁사이지만 건설한 기업이다. 동계패딩과 하절기 셔츠는 사이즈 측정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굳이 업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 보급을 위해 납품업체에 의뢰를 했지만, 해당 업체는 납품단가가 맞지 않아 추가발주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5만7000원 정도로 책정된 납품예산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4만8000원에 납품했기 때문이다.

최초 납품업체는 캘빈클라인, 리바이스 등의 국내협력 업체로 나름 건설한 기업이였다. 군은 이 회사가 생산한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되자 '인박심 동영상' 등을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군의 홍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보급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어야 할 장병들이 작아서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병 사용자 중심의 보급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123억원을 추가로 패딩형 동계점퍼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초 요구한 13만원대의 소프트셀(전투임무 등 활용가능) 대신 타이트한 패딩형 동계패딩에 돈이 들어간다. 심지어 해외파병 부대에도 '경패딩'이라는 이름으로 보급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랑보다 보급의 본질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captinm@

SK이노, 협력사 상생기금 29.6억 전달

SK이노베이션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13일 SK 울산CLX 하모니홀에서 '202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갖고 총 29억6000만원을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상생기금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1%행복 나눔기금 중 절반인 25억6000만원에 정부 및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모여 조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협력사가 기금 조성에 동참하면서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은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상생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과 정부, 협력사가 함께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추후 협력사들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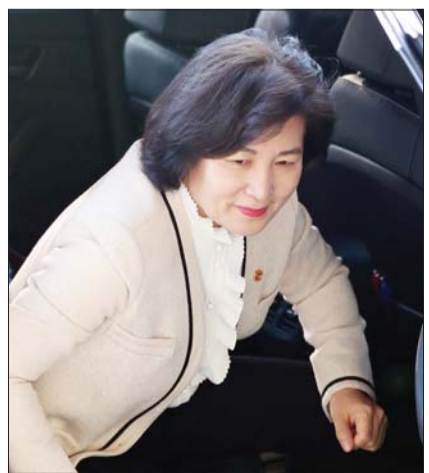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성훈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 박경환 울산CLX총괄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와 구성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1% 행복나눔 참여로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한편 가치 공유에 따른 기업 이미지 향상과 기업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사 상생기금 사업은 상호 협력하는 기업 문화를 SK이노베이션 노사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몰아치는 '추풍낙검'... 다음은 중간 간부급?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립각
靑 "압수할 물건 특정안돼" 거부
檢 "적법한 영장" 압수 거절당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풍낙검(秋風落檢)'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물갈이에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지휘부가 대거 좌전됐음에도 검찰은 청와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급까지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 예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13일에도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검찰은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 검사와

압수 물품 없이 철수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별도로 상세한 제출 목록까지 요청했지만, 압수수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도 이같은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영장을 재집행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지난주 단행한 인사 때처럼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석대성 기자